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구상과 전략에 관한 연구¹⁾

고 창 훈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문요약〉

본 논문은 제주도의 세계평화의 섬 정책의 근원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답변을 찾아보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우선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받고 그 정책을 제주지역만이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에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추구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세계평화섬 개념들의 생성과 구성의 의미를 찾고 이러한 개념들이 남북이나 국제적 교류, 4.3인권, 제주문화, 제주자연, 그리고 평화시대로서의 제주사회 등에 적용되는 정책적 맥락의 함의를 제시한다.

둘째 세계평화섬 전략이 내포하는 공간적 부문적 맥락의 의미를 정책적으로 반추하고 투시해보는 일인데 각각의 정책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영향과 의미를 부문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해 보는 일이다.

셋째 세계평화섬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경제적 자립으로의 가능성이다. 4.3평화공원이든 제주평화연구원이든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투자하여 건설되었고 그 운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평화섬 정책이나 프로젝트에 외국의 자본이 참여가 없다면,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 정책에 외국의 정부나 시민들이 참여가 없다면 이러한 정책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자본 그리고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경제자립형 평화섬 프로젝트가 제시되고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주도가 아니라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대형프로젝트로서 제주지역의 서남부지역 일대에 "세계평화섬환경가든(World Peace Village and Environmental Garden)"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본 논문은 2006년 11월 17일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이 공동개최한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전략세미나"의 주제발표문을 토대로

넷째 제주의 세계평화섬 정책이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제주형 평화시상으로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탐구한지도 20년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기간에 세계평화섬의 전략에 나타난 특징을 제주 평화섬 원리들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제주평화섬의 이론화와 정책의 형성에 기초적 자양분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제주도민들이 한국정부에 의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받고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추진하려고 있지만 제주도외 제주도 의회가 해양문명의 민주주의 전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의 개념과 논리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고 세계평화에 나름대로 기여하겠다는 명백한 의지가 없다면 세계평화의 섬은 이상주의자들의 이론적인 꿈으로서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세계평화의 섬 100년 대계를 위한 평화섬정책 10개년 로드맵을 나름대로는 제시해 보았다.

주제어: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세계평화촌, 환경가든, 평화산업, 평화교육, 평화공원, 평화지대, 실천논리

1. 세계평화의 섬 정책이 군사기지화의 딜레마를 뛰어 넘을 수 있는가?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으로 정부에 의해서 지정된 후 (특별법 155조), “세계평화의 섬” 브랜드로 특별화해 나가는 정책을 강조하기도 하고 17대 사업의 추진, ‘평화의섬 실천협의회’의 구성 운영, 제주평화연구원 개원과 운영하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계평화 섬 정책 전반을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마스터플랜 체계의 수립과 평화인프라 조성의 프로그램 마련 등 평화의 섬에 대한 종합적 비전마련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평화의 섬 정책이 향후 제주발전을 견인하면서 누구나 공감하는 아일랜드의 평화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를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마음과 손에 잡히는 형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평화의 섬 정책과 상충될 수 있는 해군전략기지를 포함한 군사기지 건설 문제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제

기되어 도민들의 논쟁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지라 세계평화섬 정책과 해군기지 건설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못할 경우 제주의 세계 평화의 섬 정책 자체가 그 실천을 제대로 이행해 나가기도 전에 좌초되고 희석화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여 진다²⁾.

위와 같은 현실인식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인 본 논문은 제주도의 세계 평화의 섬 정책의 근원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잠정적인 답변을 찾아 보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우선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받고 그 정책을 제주지역만이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에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추구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세계평화섬 개념들의 생성과 구성의 의미를 찾고 이러한 개념적 근원들이 남북이나 국제적 교류, 43인권, 제주문화, 제주자연, 그리고 평화지대로서의 제주사회 등 등 각각의 분야들에서 정책적 흐름을 주도하고 견인한 정책적 맥락의 함의를 제시한다.

둘째 세계평화섬 전략이 내포하는 공간적·부문적 맥락의 의미를 정책적으로 반추하고 투사해보는 일인데 각각의 정책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영향과 의미를 부문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해 보는 일이다. 제주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흐름 속에서 세계평화섬 정책의 지역적 의미, 북한이 핵 실험과 핵보유국으로의 진입 후의 한반도의 긴장 속에서 평화섬 정책 갖는 의미, 동북아 안보공동체나 지역공동체 추진 정책에서 평화의 섬 정책의 의미, 태평양 지역의 전쟁과 군사의 섬 속에서의 평화섬 정책의 국제적 의미 등을 반추하고 정책적인 투사를 통해 미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 섬 문명속에서의 평화섬정책의 의미를 제기한다.

셋째 세계평화섬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경제적 자립으로의 가능성이다. 43평화공원이든 제주평화연구원이든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투자하여 건설되었고 그 운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평화섬 정책이나 프로젝트에 외국의 자본이 참여가 없다면,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 정책에 외국의 정부나 시민들이 참여가 없다면 이러한

2) 코리아타이프스는 군사기지의 건설 문제를 평화 섬 제주의 딜레마로 표현하였다(

정책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자본 그리고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경제자립형 평화섬 프로젝트가 제시되고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주도가 아니라 민간자본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대형프로젝트로서 제주지역의 서남부지역 일대에 “세계평화섬 환경가든(World Peace Island Village and Environmental Garden)”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캐나다의 매니토바주와 미국의 노쓰다코다 주에 형성된 국제평화가든 (International Peace Garden)의 국경을 넘는 국경초월의 비전 (Border Vision)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러한 사고가 세계평화섬 정책과 연결되어 세계 섬들의 평화를 증진시켜 해양문명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섬비전(Island Vision)으로 가능할 수 있을뿐더러 환경친화적인 생태의 섬으로서 지속가능 섬 사회의 발전 모델로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제주 세계평화섬 정책을 견인할 선도 프로젝트로 제안하는 것이다³⁾.

넷째 제주의 세계평화섬 정책이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제주형 평화사상으로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탐구한지도 20년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기간에 세계평화섬의 전략에 나타난 특징을 제주 평화섬 원리들로 정리해 봄으로써 제주평화학의 형성에 기초적 자양분을 제공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네 가지의 논의를 수행하는 본 연구가 채택한 방법론은 현상학이다. 현상학은 특정한 정책현상에 대한 도민들이 갖는 상호주관적 의미, 즉 주관적 의미들의 객관성을 탐구함으로써 특정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정책 형성으로의 발전, 정책 집행과 평가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국면을 해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아울러 주요한 개념 형성과 정책적 흐름에 대한 과거의 시간 속에서의 반추와 미래의 시간 속으로 정책적 투사 행위를 통해 세계평화섬 정책의 업적과 결함 등을 제시하여 정책적 보완의 수단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제주도민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국정부에 의해 세계평화의 섬으로

3) Charles Thomsen, "The Border Vision : The International Peace Garden, (March

지정을 받고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해양문명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의 개념과 논리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고 세계평화에 나름대로 기여하겠다는 명백한 의지가 없다면 세계평화의 섬은 이상주의자들의 이론적인 꿈으로서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세계평화의 섬 100년 대계를 위한 평화섬정책 10년개년 계획 로드맵을 나름대로는 제시해 보려한다. 2001년 4월 1일과 2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협조로 아주 작은 규모의 Peace Island Forum을 시작하여 2006년에는 6차대회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포럼도 2100년에는 1세기를 기념하는 피스아일랜드 포럼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각 분야의 세계평화섬 정책의 100년을 생각하면서 10년의 실천을 축적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방법론이 현상학적 관찰에 근거한다는 점은 제주인들이 평화에 대한 생각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데 있다. 동시대의 제주인들 그리고 과거의 제주인들이 제주도라는 공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화의 의미, 인권의 맥락, 그리고 이러한 의미와 맥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합의와 방향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주목한다. 그 과정 속에서 제주인들이 공유하는 상호주관성과 간주간성이 그 자체적인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감대를 이루며 세계평화섬 정책의 매듭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2. 세계평화섬 개념의 생성과 정책적 흐름의 맥락

가. 세계평화섬 개념의 도서학적 근원 : 제주의 평등주의적 신화의 평화개념과 문화의 흐름

제주도 평화섬 사상의 출발점으로 평등적 신화로서 탐라국 등의 건국 신화나 설문대 할망 등이 표출한 양성평등의 사상과 제주고유어의 지킴, 제주 조랑말의 육성, 제주형 가족구조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삼무의 평화 문화를 들고 있는데 기준은 '세계평화섬 결정요인으로서의 도서학적 기

제주고유의 평화사상으로 대변되는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는 삼무의 전통이나 마을과 성문 앞에서 있었던 48기의 돌 하루방과 그 후예들, 특히 43의 비극을 뛰어넘으려 세워진 방사탑들 이것들은 도서학적 관점에서 괄목할만한 평화문화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998년 제주시의 신산공원에 제주도의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마을에서 가져온 돌들을 쌓아 올린 43방사탑은 제주 사람들이 43의 갈등과 희생을 넘어 상생과 화해의 평화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43으로부터의 평화정신을 보여주는 진수라고 여겨진다(한델스 반, “제주의 침묵은 끝났다”: 한델스블레터 : 2004.8.24.)

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섬들도 이러한 평화문화의 전통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마가리아 섬, 타히티 섬, 그리고 라파누이 섬 들을 들 수 있다. 평화의 섬의 특징은 무장한 군대가 없고 강대국의 침략이 없었다면 무장 할 필요가 없는 평화지대(zones of peace)들이다. 원칙적으로 평화의 섬은 스스로 만든 무기나 밖에서 수입한 무기로 사람을 살륙하지 않는 원칙을 간직하며 살아왔고 살아 가려한다. 따라서 평화는 마음의 평온한 상태이며 이는 지속적인 평화정책의 근원으로 유지되어 왔다(Grant McCall, “평화의 섬과 전쟁의 섬에 대한 의견과 논의 : 2006년 8월 18일의 이메일 의견서).

최근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물인 돌하루방이 미국의 애리조나주 세도나의 거리에 상징물로 기증되어 제주평화의 이미지를 미국 땅에 전했다. 이는 미국의 산호세 시의 돌하루방에 이어 제주평화 이미지의 확산 또는 수출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돌하루방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섬의 평화를 지킨다는 점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본의 무사들의 상징인 사무라이 칼 같은 전쟁문화와는 전혀 다른 평화문화의 모습을 보여준다(Willam Cannon Hunter.2005). 위와 같은 섬으로서의 평화성의 기준을 따진다면 제주도의 경우 환해장성이나 토성, 그리고 송악산의 전쟁유적지 등 역사적 유물 들은 제주 섬의 평화성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주지만 대규모의 해군기지나 공군기지는 이러한 섬사회의 평화성을 오히려 방해

다는 오히려 이러한 평화성과 상반되는 군사의 섬 또는 전쟁의 이미지를 강화시킬 위험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나. 세계평화섬 개념의 제주자연의 근원 : 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의 평화개념과 환경정책의 결합

세계평화의 섬의 자연적 또는 환경학적 기준을 생각한다면 한라산의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Biosphere) 그리고 성산일출과 석회동굴 등이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자리매김 될 정도로 제주 자연이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근원으로서 세계적인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자원으로 인식된다. 바로 이러한 자연적 아름다움이 빛나는 자연유산을 구성하는 2중 분화구 형태의 송악산 일대와 이와 연결된 화순항 일대에 군사기지가 바람직한 발전구상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는 지역주민의 주장이 제기된다. 오히려 자연적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송악산에는 세계평화촌과 환경가든 조성으로 화순항을 개발하는 것이 아일랜드 비전으로서 의미를 갖고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평화문화의 공간일 수 있다는 구상을 캐나다의 마니토바 주와 미국의 노쓰다코다 주 국경에 조성된 국제평화가든의구상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Charles Thomsen. 1996).

제주도는 단일한 타원형이 섬이라서 8개의 큰 섬으로 구성된 하와이 제도나 4개의 큰 섬으로 구성된 오키나와 군도와는 다른 지리적 구성을 보여준다. 즉, 해군기지가 공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1/4정도의 해안선과 경관이 직간접적으로 군사기지의 영향권에 포함되므로서 군사기지와 관광지로서의 상호간의 공유가 여러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역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환경적 폐해가 상당할 뿐더러 천혜의 관광지와 겹치는 장소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산방산 밑의 도로가 사실은 군사도로로 건설되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눈이 부실정도로 아름다운 산방산 앞으로 펼쳐지는 송악산, 안덕의 화순항 사계의 해안도로, 가파도와 마라도로 이어지는 모슬포항의 뱃길, 고

군의 작전구역이라 하여 여기저기가 출입이 금지되어 봉쇄된다면 모슬포의 아름다움 자체가 상당히 훼손될 여지가 많다.

또 한 가지 오늘날 환경은 그 자체가 안보개념으로 다루어지는 (Environment as Security) 흐름이 주류를 이루는데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은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이 덜 훼손되는 발전안을 지지 할 수밖에 없다 (Dai-yeun, Jeong, 2006).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도는 환경 그 자체가 안보이다. 즉, 환경보전에 있어서는 최악의 대안인 해군기지나 공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제주도의 환경안보 자체를 위협하는 큰 원인이므로 제주도 한라산 등의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이나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관리와 보전에 어려움을 나타낼 경우 UNESCO의 자연유산 자체가 취소될 위험 역시 갖게 된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경우는 단일한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규모의 군사기지가 들어설 경우 이러한 자연환경의 보전 유지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환경학자나 환경활동가의 공통된 견해이자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 세계평화섬 개념의 국제적 교류의 역사적 근거들과 정책적 흐름

제주는 1991년 이래 세계정상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냉전의 해소는 물론 남북평화, 동북아시아 평화를 논하는 교류협력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고 이러한 역할은 제주국제평화연구원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평화교류의 사례는 360년전 네델란드의 표류인 헨더릭 하멜씨의 구조와 이로 인해 한국과 제주를 전세계에 알리는 일에서 비롯되었다. 제주는 세계정상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세계의 평화를 논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군사기지 건설이 유리한지 아니면 세계평화가든의 조성 등의 정책이 더욱 타당한지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긴장과 대립의 징후가 농후한 동북아시아에서 제주도가 세계평화

협력체제 구축 등을 목표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받고 국제적 역할을 하겠다는 사고는 상당히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다. 여기서 필자는 고산이나 모슬포 일대 선사시대 이래로 대륙과 섬과의 교류만이 아니라 세계와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제교류를 일반화시키고 관광지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 일대에 '세계평화촌'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여기서 평화촌은 하멜 기념배가 있는 일대에 네델란드 거리를 만든다든가, 고산일대에 차이나타운이나 유럽타운을 조성해주는 것으로서 국제적 평화교류의 역사와 문화를 상업화하는 방식이며 외자를 유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계평화촌'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세계평화섬의 한가지 정책으로 삼아 연구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창훈, 2006a).

라. 제주4.3으로부터 생성된 인권개념과 세계평화섬 정책과의 연결

1998년 4.3 50주기를 기념하면서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시 신산공원에 마을별로 가져 온 돌을 쌓아 4.3 방사탑을 완성하였다. 4.3으로 인한 인권피해의 희생자 후손들이 인권존중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화해와 상생의 방사탑을 세움으로써 4.3으로부터의 평화실천이 가능함을 알렸다. 그로부터 5년여 세월이 흐른 2003년 10월 대한민국정부는 4.3진상보고서를 공식 채택하였고, 동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주4.3문제에 대하여 제주도민에게 공식사과하고 아울러 제주도를 인권과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평화의 메카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정책지원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바로 이러한 4.3진상규명의 지역적 운동과 흐름이 제주4.3이 왜 인권과 평화섬의 이론적 현실근거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말해준다.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의하면 제주4.3의 피해자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희생자인 만큼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적절

학살(genocide)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행된 5차례의 대규모 학살(Jeju Grand Massacre)로 국가에 의한 제주도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제4·3의 인권개념이 생성된 바, 그것은 반 집단학살(anti-genocide)을 근본으로 하여 약소국가나 양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유엔의 정신을 계승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제4·3은 세계인권의 개념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이다. 제4·3이 유엔의 국제협약에 의한 인권의 개념을 발전시켜나가려면 유엔이 설정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제주국제사회도시의 발전을 위한 유네스코의 준거(들)⁴⁾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연, 문화 그리고 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에 적용되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4·3이 유엔이 규정한 반 집단

- 4) 유네스코의 헌장서문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헌장서문은 다음과 같다.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법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 때문에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大)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지고 객관적 진리가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며 사상과 지식이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소통수단을 발전시키고 증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기 위하여 이 소통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그 결과 당사국은 국민들의 교육·과학·문화상의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그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국제평화와 인류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기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① 교육을 통한 평화문화 정착, ②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 ③ 인권의식의 고양, ④ 남·여 평등, ⑤ 지식과 정보 및 참여커뮤니케이션의 지원, ⑥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을 경

학살의 개념에 의거한 인권개념이라면, 제주의 자연, 문화, 그리고 사회 역시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나갈 때 4·3에 근거한 인권개념과 함께 보다 균형있게 발전해 나갈뿐더러 제주4·3의 평화섬 정책으로 성숙해 나갈 것이다(David Kim. 2006, Sung Soo Kim.2006).

마. 태평양지역의 군사의 섬 벨트로부터 생성된 세계평화섬 개념의 정책적 의미

하와이에서부터 제주까지 펼쳐져 있는 섬들은 군사기지가 있는 섬들이 많다. 하와이- 마셜 아일랜드 공화국 - 괌과 사이판 그리고 오키나와...그리고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들어선다면 아일랜드 군사벨트가 형성되어 대만까지 이어지며 중국대륙과 마주 한다(Glenn Paige. 2006).

그런데 제주도는 2005년 1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받아서 군사아일랜드 벨트위의 태평양 섬들을 향하여 평화섬과 평화추구의 문화를 회복과 공유하면서 오히려 태평양의 섬들이 군사기지의 질곡을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가 도입해야 할 산업은 군사기지에 의존하는 기지의 경제(군수산업에 의지하거나 군사기지에 의지하는)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섬 정책과 평화문화에 근거한 평화산업(Peace Industry)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평화산업의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관광산업이다.

세계적으로 평화산업이나 문화를 일으켜 세우는 도시나 지역은 관광업이 그 핵심이다. 제네바 호수를 낀 제네바와 로잔시가 그렇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코스타리카의 산호세 시 등이 그렇다. 따라서 제주는 관광산업이나 회의산업 그리고 최근의 BT CT IT 산업의 육성에 주력하면서 평화산업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

최근 제주대학교의 송필순 석좌교수팀이 늦게 자라면서도 푸른 색소는 많고 병해충에 강한 '제주 잔디'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특허를 받았는데 몇 년 후면 세계의 잔디 수출지역이 될 수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평화산

출을 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산업은 UNESCO의 생물권 보전지역의 식물 보고를 더욱 튼튼하게도 하고 풍요롭게도 하여 평화 교육, 평화회의 및 평화축제를 키워나가게도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인 프레데릭 더스틴 교수는 미로공원을 조성하여 그 수입을 올리고 그 수익금으로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석좌교수 등을 후원하는 등 제주지역에 환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 역시 공원 건설과 운영을 통한 평화에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제주도에 개관된 해녀박물관이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해녀의 생업기술과 그 문화와 민속을 지방 및 국가문화재로 뿐만 아니라 UNESCO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논의가 있다. 제주해녀의 경우 전통적인 기구만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 자체가 자연 친화적이고 평화적이다. 이러한 평화적인 잠수기술과 문화와 노래가 제주문화의 평화성과 그 생명력을 대변해 준다고 할 때 이러한 평화문화의 보전과 제대로 된 계승은 향후 세계해녀공원의 조성 등 문화를 주제로 한 평화산업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제주의 동굴이나 성산일출봉 등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하면 그 자체가 평화산업의 근원이 된다.

군사기지의 건설이 단기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존적 경제구조를 만들고 사회적·환경적·심리적의 경제 비용이 너무 커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태평양 세계의 섬들이 교훈이었다. 반면 평화산업은 초기에는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갈수록 그 경제적 효과가 크고 자립경제의 틀을 세워 주는 만큼 세계평화섬 제주는 평화산업의 근간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창훈, 2005).

3. 세계평화섬 전략의 지역적 국제적 맥락과 정책 에이젠다

가. 세계평화섬 전략의 지역적 (도서학적) 맥락과 정책 에이젠다

앞의 세계평화섬 개념의 논의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추구하는 세계평화의 섬은 대규모의 군사기지를 갖고 있지 않은 세계평화의 섬으로의 발전을 모델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 의미도 크다.

일반적으로 평화추구의 모델로 이야기하는 스위스나 스웨덴 등은 일정한 군대를 갖고 있고 스웨덴은 무기를 생산하여 외국에 판매까지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 자체가 제주도의 모델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나라들에 존재하는 평화도시인 제네바, 로잔, 또는 오슬로나 스톡홀름 등의 도시가 추구하는 평화추구의 전통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도의 경우 아직은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라 한국의 군대의 보호를 받는 특별자치도이며 한국에 속한 섬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한국의 군대가 보호해 주고 있고, 또한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을 만큼 평화의 섬으로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별도의 군대나 군사기지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낮다.

제주도와 같은 사례는 유럽지역에서는 단일한 나라가 아니라 특정한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곳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군사기지가 없는 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은 예는 스웨덴의 알란드 섬이나 노르웨이의 스피츠버그 섬이 바로 이러한 특별한 사례의 섬들이다.

두 섬은 국제협약에 의해 비무장 비 군사지역의 평화의 섬으로 특정한 지위를 인정받고 그러한 국제적 인정을 근거로 평화섬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두 개의 유럽에 위치한 섬이 특정한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나라가 합의하여 평화의 섬을 이룬 사례라는 점 때문에 제주도가 추구하는 세계평화의 섬이 진정한 모델일 수밖에 없다(Marie Jacobsson, 2006).

나. 세계평화섬전략의 국제적 맥락과 정책 에이젠다

1) 한반도 중립화와 6개국의 집단 지역안보체제에 대한 국제협약을 생각할 때이다.

에서도 군비경쟁이 아니라 경제협력과 집단 안보체제의 논의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유럽은 경제협력체를 넘어 정치적 유럽 공동체까지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미국이나 아세안 국가들도 집단안보체제를 도입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협력적이다. 그러나 아직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미국, 러시아 등 6자회담의 당사국들의 경우 기본적인 협력체제보다는 경쟁과 대립의 구조 속에 얽매어 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여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에 대해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은 핵무장론으로 맞서고 있는 대결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한반도를 중립화하는 구상은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은 인정하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 기준에 의해 제재와 봉쇄의 채찍과 대화와 협상의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차기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씨는 하버드국제리뷰의 2006년 여름호에 발표된 논문 "핵무기 도전과 냉전을 넘어 항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Gi Moon Ban, 2006)에서 제시한 동북아평화에 대한 구상은 한반도의 중립화에 가까운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한반도의 중립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제주도는 군사기지를 갖고 군비경쟁을 하는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될 것이다. 오히려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동북아 지자체간의 평화와 협력을 견인하는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반기문 장관의 동북아 영구평화론의 제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도자와 지식인의 염원이었다. 1910년 안중근 의사의 아시아 평화론이나 1930년대의 이승만 씨가 프린스톤에서 받은 박사학위의 주제 역시 한반도에서의 중립국 평화론이었으며, 김구선생 역시 문화대국으로서의 중립국 평화론을 제기했고, 함석헌 선생은 중립국 평화론을 보다 체계화시켰다. 이러한 한반도의 중립화론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아시아 영구평화론의 틀 속에서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키면서 그의 재임 기간에 유엔을 통해 한반도의 중립화한 것이다. 6개국의 김영,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기구를 제주도에 설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창훈, 2006c).

2)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 3개국 통일연합 : 북한, 남한, 그리고 제주도 공화국”(United Three States of Korea : North, South, and Jeju Island Korea)의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발하고 또한 세계평화의 섬을 선언한 이유는 향후 중립국을 지향하고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는 한반도 중립지대화를 정책목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립 속에서 세계평화의 섬의 역사적 역할은 “한국 3개국 통일연합 : 북한, 남한, 그리고 제주도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창훈, 2002c).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맥락에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다면 제주도는 세계평화섬 발전 10개년 정책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주도는 군사기지가 아니라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거나 창립하여 국제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국제적인 평화인프라 시설의 구축을 하여 평화산업(Peace Industry)의 기반을 조성하여 스위스의 제네바 같은 평화도시로 성장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추구를 견인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창훈,2006a).

3) 아시아 평화교육센터와 동북아 집단안보체제기구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세계평화촌과 환경가든(World Peace Village and Environmental Garden) 조성하자.

제주도가 제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가칭) 유엔평화활동지원센터나 아시아평화교육센터 그리고 동북아 6개국의 집단안보기구 등과 같은 조직을 제주에 창립하거나 세계평화촌과 환경가든(World Peace Village and Environmental Garden) 조성을 제주도 서남부권에 제안된다면 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은 평화의 섬 위상을 제고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의 섬을 위한 국제 협력적 안보와 평화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가 유치하려는 동북아 평화교육센터와 2008년 세계섬학술대회와 연계하여 섬유엔 같은 국제기구를 창립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나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과 자연유산과 연관지워 만들어질 국제적 연구 기구의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이러한 국제기구 창립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국제적인 협약 특히 6자회담 같은 틀에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이에 걸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세계평화섬 정책 논리는 북한의 개성공단 운영, 금강산개발, 남북 철도사업과 함께 휴전선의 지뢰제거 작업을 유엔의 지지 하에 남북한 공동으로 시작하고, 작업이 완료된 지대들을 평화생태공원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위와 같은 평화사업은 남북 공존과 이를 토대로 한 동북아의 평화 진작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유엔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4) 아시아공동체 (Asian Community)을 견인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를 제주에 창설하자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를 가진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향후 동북아 협력체의 실질적인 논의가 지방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며, 한국의 제주도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실험을 의미한다는 점이라고 본다.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중국의 동북공정의 논리를 등을 볼 때 일본의 중앙정부나 중국의 중앙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생각하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실질적인 준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 또는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시 홋카이도 등 지방정부나 도시들이 동북아의 평화공동체 논의의 주체로 나서고 중국의 경우 역시 홍콩이나 기타 지방정부가 이러한 일에 나선다면 지방정부들이 진정한 동북아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 스페인의 경우 스페인 16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EU에 공동 참여하여 EU에서의 결정권에서는 각각 1표를 행사하는 등등한 권력으

가졌다. 이러한 EU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은 스페인의 지방정부 자치역량을 20년 만에 중앙정부와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향후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성시 지방정부 이상을 회원으로 구성하는 EU의 전례를 따른다면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자치적인 국제 역량을 키워 나간다면 동북아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제주도가 그간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도시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섬관광정책포럼을 형성, 평화도시네트워킹의 경험과 세계평화섬으로서의 위상 등을 살려 아시아 공동체를 견인할 수 있는 아시아 지방자치단체 연합을 제안하고 구성해 나간다면 이는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창훈, 2006c).

4. 세계평화촌 환경가든”의 섬 비전이 세계평화섬 100년 대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

가. 세계평화촌 환경가든 (World Peace Village and Environmental Garden)이라는 피스아일랜드 비전에의 인식과 평화상품성으로서의 가치

최근 제주도는 서부산업도로의 명칭을 평화로로 바뀌어 그 길을 달릴 때마다 끝머리에 잡히는 산방산과 송악산 일대의 장관 그 자체가 도민은 물론 관광객 모두에게 평화스러움을 주는 평화의 성지로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다. 바로 저 지역에 세계평화촌 환경가든을 유럽식으로 역사와 문화 그리고 평화교류의 장소로 조성된다면 아시아의 평화의 명소가 되고, 섬과 대륙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사성도 새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다.

360년 이상 평화와 군사의 기억들을 간직한 송악산 일대가 다시 초점을 받기 시작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다. 하나는 88년 송악산 공군 기지건설과 2000년부터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논의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현대전에서 복합전이기 때문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이를 뒷받침하는 공군기지는 당연히 같이 들어오게 된다. 또 하나는 1991년 세계평

화공원의 조성이 제안된 이후 안보공원, 전쟁과평화 공원, 세계평화촌, 전쟁관련 근대문화유적 및 유물, 그리고 세계평화섬 환경가든으로의 육성 등 평화적 이용 논의가 지속되어서이다. 이러한 사고는 이 땅을 역사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그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국제관광이나 세계평화의 개념과 연결 짓는 평화적 사고의 표현이라고 본다.

우선 제주도가 한국정부에 의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이를 세계적으로 상징화시킬 수 있는 '세계평화섬 환경가든'이 필요할 뿐더러 이를 향후 50년 정도의 노력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의 국제평화가든의 사고와 비견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제주도의 환경가든은 평화문화와 관광 및 환경 그리고 교육을 종합하는 '섬평화'의 실용주의적 종합을 구체화한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경우 4.3평화공원이 2008년 완성되는데 이는 인권과 평화교육의 상징으로 육성되어지고, 중문단지의 제주국제평화센타는 연구 중심이라면, 송악산의 환경가든은 제주도민과 외국인 모두가 평화환경가든을 조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아일랜드 평화환경가든'은 네 가지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국제관광과 평화의 시각에서 묶고 연결하여야 한다.

(1) 아일랜드 환경가든의 경우 송악산 알뜨르 비행장 유적지 일대의 60만평의 문화유적지내에 유적지의 복원은 물론 유엔평화활동지원센타, 국제음악공연장과 음악캠프, 아시아환경가든, 그리고 국제평화마을단지로 구성하되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발전시켜 나가게 하며, 향후 제주도가 건설하게 될 아시아평화교육센타 등의 기구를 유치하는 등의 기본 방향을 확정한다.

(2) 아일랜드 환경가든의 경우 제주지역 서남부구권을 세계평화섬의 핵심사업들로 연결 짓는 핵심 키워드는 "평화문화"이어야 한다. 우선 모슬포의 송악산 일대의 세계평화섬 환경가든 안덕 화순항의 국제미항의 관광항구의 개발과 평화크루즈 사업의 입안과 실행, 용머리 해안 스페르 베르흐 등은 보와치는 기념관 건립 차계리 바다기이 현성기대 보건

고산지구의 신석기 유물 박물관, 가파도 고인돌 박물관과 마라도 지역의 환경가든 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기념물 제12호인 대정성지와 제주도 기념물 제59호인 추사적거지를 2006년 3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하였다. 대정성지와 추사적거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것이므로 문화재 복원 및 정비 사업도 이루어지지만(제주일보 : 2006년 11월 3일자) 제주도 서남부 전체를 “평화 문화의 성지”로 키우겠다는 세계평화섬 정책의 로드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기본 계획안에는 20개의 격납고의 보수사업, 전통적인 오두막, 자갈길, 다리, 야외취사장, 원형극장, 댐, 인공호수, 저수지, 산림녹화, 담장과 방풍과 야생동식물 보호 차원과 세계의 여러지역 사람들이나 관광객들로부터 대규모 식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008년 이후평화 패널, 테라스 패널, 침상원, 폭포 패널 등 전원사업이 이루어지고, 2009년에는 부대 시설로 음악관, 식당, 부엌, 다양한 지원시설과 트랙, 야외훈련장 그리고 섬 지역으로의 출입과 육지로부터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평화섬의 두개의 문이 건설되어진다. 그리고 평화 사원, 평화탑 건설, 그리고 헨드릭 하멜 강당, 추사 김정희 예술관 건설, 국제기구사무실 건설 삼의사 기념공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송악산 세계평화섬 제주의 상징이 될 것이다.

(4) 제주도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송악산의 세계평화섬 환경가든 조성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주대 평화연구소 제주발전연구원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 제주도민들에게 2008년 상반기까지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도가 국회에서 해군기지 기초연구비로 책정된 20억중 50%을 세계평화섬 환경가든에 투입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과 화순향 해군기지와 송악산공군기지를 비교시켜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 질것이다. 특히 유엔평화활동지원센터나 세계 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경우 세계평화섬 발전 10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평화의 미래비전을 알리는 브랜드의 의미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안이 가능해진다.

나.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서의 국제평화가든의 조성 78년의 성과와 교훈으로부터의 정책적 반추(Policy Refelexion: 1929-지금)

캐나다와 미국의 광활한 국경에 평화가든의 생각이 구체화되면서 그 개척의 첫 삽을 뜬 것은 경제대공황 직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였다.

1932년 7월 14일 미국과 캐나다 시민 5만명이 국제평화공원의 부지 헌정식 겸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1929년 캐나다 식물학자 헨리 무어 박사의 제안으로 1929년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평화공존을 기념하고 세계평화에의 헌신을 표상하기 위하여 국제평화가든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미국 정원가학회에서 추진되어 국제평화가든 위원회가 구성되고 후원 조직으로 국제평화가든 의회가 결성되고 양국의 자생식물들, 온실, 다양한 종류의 정원들, 라디오 방송국, 학교를 포함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 진다.

자금조달은 신문, 라디오, 연설을 통한 캠페인으로 충당되는데 소수로부터의 고액 기부보다 다수 특히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우리를 모두의 정원'을 표방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나감으로써 당시의 모금총액이 5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부지선정 위원회는 북미대륙 중심지역으로 결정하여 캐나다 Manitoba주로부터 1451.3 에이커, 미국의 North Dakota로부터 888 에이커 기증을 받아 시작됐다. 이는 국제평화가든 사업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다(Charles Thomsen, 1996).

이후 1934년에는 미국 시민 보호단 (CCC) 캠프가 설립되고, 1934-1941년에 초기공사가 이루어져 오두막, 자갈길, 다리, 야외취사장, 원형극장, 댐, 인공호수, 저수지, 산림녹화, 담장과 방풍과 야생동식물 보호 차원에서 대규모 조림사업이 이루어진다. 1950-1955에는 평화 패널, 테라스 패널, 침상원, 폭포 패널 등 전원사업이 이루어지고, 1956년에는 부대시설로 음악관, 식당, 부엌, 다양한 지원시설 확충되고, 1962년 트랙, 야외훈련장, 승마시설 건설, 1964년에는 두나라의 국경에 상징적 정문 완공된다. 1965년 Donald F. Wolf 과 같은 1966년 계획 기간 동안 1967년 10월 15일

회사), 1968년 모든 종교를 망라하는 평화 사원 건설, 1975년 종탑 건설, 1981년 프리메이슨강당 건설, 1982년 평화탑 건설 (36.6 미터)을 거쳐 50년의 역사 끝에 국제평화공원의 기본 틀이 완성된다.

1983-1987년의 시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든건설의 보완 등에 대한 제안과 기증이 제시되자 14인 기획위원회를 구성 정원계획 변경안인 종합안을 마련한다. 1986년에는 North Dakota 주에 분수를 건설하고 1994-1995년에는 6동의 새 숙소와 500석의 공연센터가 건설된다.

정원측의 집계에 따르면 방문객 수는 1989년에는 12만7000명이었고, 1995년에는 2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원의 주요 이용 현황은 1977년 미국과 캐나다 간의 국제분쟁 해결 회담장소, 1995년 22개국 2778명의 학생들 국제음악캠프 참가 등의 국제행사가 이루어지는 등 인류의 위대한 야망과 숭고한 이상인 세계평화의 산 증인이자 비전창출의 장소로서 두 나라 국경에 걸쳐 있다.

다. 대륙과 섬간의 평화교류의 상징으로서의 “세계평화촌 환경가든”의 조성과 국제적 가치에 대한 정책적 투사 (Policy Projection : 1653- 내일).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평화가든의 꿈이 현실화했다면, 송악산 일대에 제주도 세계평화섬의 환경가든에의 꿈을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은 무엇이며 오늘 속에 무엇으로 살아나고 그것이 세계평화섬 환경가든의 조성을 통해 아일랜드 평화를 이어나가고자 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우선 360년전 대만에서 일본으로 가던 스페르베르호라는 배가 태풍으로 모슬포 용머리 해안가에 이르렀을 때 그 선장 하멜은 "여기서 죽는구나"하고 했지만 제주목사 이원진 등을 포함한 관원들은 하멜을 포함한 36명의 선원을 후하게 대접했고 보호해주었다 (Hamel's World). 그들은 이후 한양으로 압송되어 가혹한 조사와 대접을 받다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하고 후에 네델란드로 돌아가 한국과 제주를 유럽에 알리는 책을 쓰게

쟁을 해결하는 구원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음) 그는 제주도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하멜 상륙 350년을 기념하여 용머리 해안가에 제주도가 유럽에 평화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네델란드인 헨드릭 하멜과 제주도 사람들의 만남을 기념하여 스페르 베르호의 복원을 하여 세계평화섬의 국제적 의미를 담아 놓는다.

그 이후에도 송악산 일대를 둘러싼 평화와 전쟁의 기억들은 다양하게 쌓인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9년 유배의 삶 속에서 세한도와 추사체를 남긴 예술적인 삶은 그 자체가 송악산을 울리는 평화사상이어서 추사적 거지로 남아 있고, 1901년 이재수 장군 등이 이끈 신축항쟁 역시 지역 나름의 평화를 지키려는 지역민의 투혼을 남겼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는 송악산 일대를 전쟁과 군사의 기억으로 덧씌워 놓는다. 1920년대 후반부터 송악산 일대 공군비행장을 건설하고 전쟁의 기지로 활용한다. 그리고 1945년에 이르러 7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일본 군 주둔을 시키면서는 송악산 일대에 수많은 진지 동굴을 파 놓는다.

해방후 이곳은 한국군 제 9연대 주둔과 제주 43을 지휘한 무장대 사령부와 4.28 화평회담에 대한 기억 역시 간직하고 있다. 전쟁수행에 대한 기억도 있다. 6.25 발발 후 모슬포에 제2훈련소가 생기고 안덕의 화순항도 군사항으로 사용되어 한국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역할을 수행한 기억이 있다. 1950년 첫알오름에서의 4.3희생자를 집단학살되었고 훗날 백조일손지묘의 기념탑이 세워진 기억도 갖고 있다(고창훈.2006a).

라. 세계평화촌 환경기든의 내용구성에서의 외국자본과 인식공유와 투자위치

세계평화촌 환경기든은 세계인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캐나다와 미국 국경의 국제평화기든의 시민참여적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업의 큰 줄기는 외국자본과 한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연구되고 제시되어야 하므로 외국의 자본이나 연구기관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 가든은 여러 도시에 있는 평화촌이나 평화공원이나 문화공원의 건설을 그 모델로 삼되, 모슬포 안덕 고산 무릉 지역 등의 제주 서남부 권의 자연적·역사적·문화적 특징과 가능성을 최대화 시켜나가면서도 마을 나름의 특성과 문화 등을 특성화시켜 나가도록 참여시키되 전체적으로 세계평화촌을 구성하고 연결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1999년 미국의 회사와 공동으로 이 지역에 국제병원과 평화공연장 등의 유치를 중심으로 한 평화섬 프로젝트에 자문한 바가 있는데, 이 지역의 프로젝트를 외자유치로 가져가려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회사와 연구기관의 공동 참여 하에 계획을 세워야 할 뿐더러 외국 자본과 제주도민의 세계평화촌 환경가든의 내용을 공유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평화이미지 구축과 세계평화의 섬 전략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외자유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세 가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외자유치는 이익을 내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도민과 외자 투자가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지닌 프로젝트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입장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장기적 차별성과 경쟁력을 고려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미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세계평화섬 정책의 선택을 세계평화촌 환경가든으로 정리를 하여 외국의 자본이나 제주도민 모두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선 그 곳이 너무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곳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 아름다운 경관 못지않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역사 박물관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수산봉 일대 1만 2천년 전의 선사 유적, 이재수 장군을 비롯한 삼의사비, 사계리의 5천년(5만년 전)의 동물발자국 유적지, 하멜표류지, 추사적거지, 송악산 정뜨르 비행장의 20개의 비행기 격납고 유적, 제주43 당시의 4.28화평회담 장소, 백조일손지지와 학살터, 제2훈련소의 비행장과 한

부터 현대의 역사의 흐름과 연결된 아름다운 자연은 그 자체가 세계평화촌이 되며, 이러한 틀 속에서 송악산 일대에 환경가든을 조성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국방부가 이 지역의 60만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988년 이후 군사비행장으로 건설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쓰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2006년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이 기회에 인수하여 세계평화촌을 건설하여 세계인이 평화문화를 공유하는 곳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기의 경우 너무 아름답고 유적지가 많으므로 북 유럽의 네델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나라가 도시의 건물을 자연경관에 맞게 짓는 것처럼 역사적인 유적을 100% 보전하면서도 가장 경관을 중시하는 자연친화적인 발전방식을 적용했으면 한다. 20개의 격납고를 역사유적으로 지정 복원시키면서 이 지역에 맞는 유럽식 발전방식의 도입을 하여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 건축가들의 견해이다.

예를 들면 하멜기념관이나 네델란드 거리 조성은 네델란드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 등 역사적인 경험과 투자유치를 결합시키는 방식을 쓰고 나머지 땅은 그대로 보존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면 해당 주민들만이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 특히 모슬포지역은 군사지역으로서의 고통을 100년 가까이 감당했던 만큼 이제는 평화지역으로서 세계평화촌 환경가든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본다.

(1) 우선 유럽지역에서 평화산업을 주도하는 두개의 도시인 스위스의 제네바와 로잔 시는 제네바 호수를 활용하여 평화와 관광을 결합시켰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두 개의 도시에 연간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국제회의가 6,000개가 넘을 정도이니 하루에 20개 정도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회의와 협상에서 관광은 대안 마련과 협상타결이 열쇠가 되어 제네바 호수와 아름다운 산간지역은 평화중재의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와 산은 이러한 점에서

평화중재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자원이다.

(2) 북유럽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노르웨이의 오슬로가 평화촌과 도시를 어떻게 상업적으로 발전시키며 외자와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계획을 세워 성공적이었는가를 보아야 한다. 노르웨이 오슬로에는 대학과 방송과 노벨위원회 노벨평화공원이 어우러져 도시 전체의 평화문화를 만들어 낼 뿐더러 건물 하나하나가 노르웨이식 특징을 나타냄으로써 평화문화 형성에 기여케 한다는 점이다.

(3) 캐나다의 미네토바주와 미국 노쓰 다코다주 사이에 조성된 국제환경가든의 아이디어와 민자유치의 방식을 연구하여야 한다. 60년 가까운 세월 어린 학생 그리고 수많은 시민의 헌금과 자원 봉사 등으로 이 공원의 많은 부분을 이루어 간 점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4)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시는 평화공원과 평화교육 그리고 관광과 연결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산호세시는 산체스 대통령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1948년 비무장 중립국가의 선언을 기념하여 유엔평화대학을 유치한다. 그리고 중남미 지역간의 평화협정을 기념하는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중남미의 평화추구의 전통을 이어간다.

(5) 아시아권의 경우 나가사키가 네델란드 상륙을 기념하는 상업적 거리로서의 하우스텐보로 상가, 대만 대남의 치칸 타우어 등의 거리, 오사카의 국제교류센타 건물 운영, 싱가포르의 중동 외교사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거리 등등을 점검하여 역사 문화 그리고 평화를 접목시키되 민자유치로 조성할 수 있는 세계평화촌 육성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6) 남아프리카의 경우 게이프타운시 앞에 있는 로벤 섬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구금되었던 감옥이 있는 데 이를 잘 보존하여 인권과 평화의 성지이자 관광지로 조성하여 아프리카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장으로 꾸몄는데 이렇게 평화의 성지를 세계와 함께하는 방식은 아름답다고 보여진다.

(7) 본 프로젝트의 연구는 국내외의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아시아지역 연구팀, 유럽 및 아프리카 연구팀, 그리고 캐나다와 남미의 연구팀을 구

루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1999년 Peace Island Project로 제안되었던 동서양의학을 접목한 초대형 국제병원유치 가능성 및 이와 접목한 국제 음악공연장 등의 내용이 세계평화촌 환경가든에 유치가 가능하며 그것이 제주도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하와이, 오키나와, 괌 군사기지로 부터 얻는 교훈

가. 군사기지 경제의 부정적 증후군

최근 농협중앙회는 2006년 10월 전국 5082개의 점포망과 7만 5000명의 직원을 가졌는데 제주의 서귀포 혁신도시 지역에 농협연수원을 1만평 규모로 2008년 완공시키면 2009년의 경제적 효과는 년 200-300억대의 관광 조수입 증대, 도민고용의 창출 효과, 지방세수의 확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룬다는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해군이나 국방부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7000억 가까운 경제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 낙후한 산남지역의 경제적 부양효과 물론 제주지역의 낙후된 경제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논리만을 전개할 뿐 농협연수원 유치의 경제적 효과처럼 명백한 것이 없어서 그 신뢰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군사기지의 경제적 효과는 단순한 수치로 측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미 군사의 섬이 되어버린 태평양 지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수 밖에 없다.

제주도가 섬지역에 위치해 있는 국제관광지면서 위치적으로 태평양에 위치해 있고 관광이 중요한 산업이며 군사기지 있는 섬지역으로서 하와이군도 오키나와 군도 그리고 괌 등 세 개 지역의 사례를 본다면 군사기지가 지역의 경제에 총체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그 사회적 심리적 환경보전의 비용 등을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태평양 주요 섬의 군사기지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 경기부양적 측면 (보상금과 시설투자) 2) 경제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기여도 3) 군사기지로 인한 군사화의 사회적 경비 (직업의 종류

와 고용 그리고 군사문화 등등) 4) 환경적 폐해와 이의 복원을 위한 경제적 비용 등의 내용을 균등하게 살피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군사기지의 경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 하와이 군사기지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와 환경의 후유증

2004년 미국방부의 통계에 따르면, 하와이의 군사규모나 군인인구 등을 먼저 살펴보면 161개의 군사시설이 있고, 군인이 장악하고 있는 군사기지로서의 토지는 236,300 에이커이다 (하와이 토지의 약 5.7%). 오하 후 섬의 경우 85,718에이커로서 이 섬 토지의 약 22.4%에 이른다. 군인이 통제하는 해양지역의 넓이는 군사작전지역으로 210,000 평방 마일이며 군인 항공통제구역으로 58,599 평방마일이다(Kyle Kajihiro.2006).

2003년 현재 44,458명의 군인과 56,572명의 군인가족으로 이는 1,257,608명의 전체인구의 8%에 해당하고, 군에서 제대한 직업군인 116,000 합하면 군대와 연관된 인구는 217,030명에 이르고 이는 하와이 전체 인구의 17%을 구성한다.

경제적인 규모와 의존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2003년 군사비용의 지출은 45억불 (4조 5천억)에 이르러 하와이에서 관광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미국내의 국방비 지출내용에서도 버지니아 주 다음 순위로 군인 1인당 2,566불이었다 (2백5십6만6백원). 이러한 미국연방정부의 군비에 대한 지출 증가는 군인들의 집구입비가 올라가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군사기지의 과다한 사용은 토지 180만평을 하와이민으로부터 착취하는 것과 같아서 하와이민의 경제 부양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와이 사람이 땅을 잃게 되면서 농사를 못짓는 등 원주민은 집도 없이 가난과 질병 범죄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구조의 건전성은 붕괴되고 미국식 자본주의와 군사주의의 결합형태가 나타난다.

군사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하와이 원주민 문화의 존속이 어려워져서 붕괴되고 폭력과 범죄의 증가, 매춘행위의 보편화, 젊은세대의 군사

총원율이 7.3%로 몬테나주 다음을 차지하는데 젊은세대의 미국화와 군사화를 동시에 촉진시켰다.

하와이 경우에도 군사기지의 환경오염은 점점 증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4년 미국의회에 보고된 환경회복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 108개의 군사기지에 798개 군사오염사이트가 있었고, 이 중 96개는 중대한 오염이었고, 이 중 7개는 엄청난 복구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해군의 경우 749개의 환경오염 사이트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10개의 오염물질 중에는 납 수은 나트륨 화학무기 방사능 오염물질, 코발트 등이 있었다. 1964년부터 1978년까지 진주만에는 4,843,000갤론의 낮은 수준의 방사능오염 쓰레기가 처리되었고, 2189개의 강철 드럼이 하와이 섬 55마일 너머에 버려졌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아시아나 태평양 사람들이 이주한 지역에서 발생되어 이러한 상황을 오염의 '환경적 종족주의'과 규탄하는 비난이 쏟아지곤 한다.

이러한 증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은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진다. 1100개의 고유한 천연종류의 동식물중 약 82%가 위협에 처해 있다. 박물관 등에는 위협에 처한 새, 식물, 곤충 등의 종류를 나열하는데 이러한 종류와 범위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종합하면 하와이는 년 4조 5천억불의 군사비용의 지출로 군 종사 인구가 17%에 이르지만 하와이의 고유산업 구조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관광업보다 적게 낮게 나타나며, 이로 인한 문화의 파괴, 사회적 부적응의 비용, 그리고 엄청난 환경비용은 하와이 원주민들의 경우 군기지의 철수와 이전을 요구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Kyle Kajihiro, 2006).

다. 일본 오키나와 군사기지의 경제적 부정적 효과와 사회적 문화적 충격

소수의 미군주둔지지자들은 아직도 미군주둔이 오키나와 경제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군주둔이 수입의 안정적인 근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건강

오끼나와의 실업률은 일본 내 최고이며, 일인당 GDP와 개인소득은 일본의 47개 현 중 최하위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몇 십년간 미군주둔이 관광업보다 훨씬 뒤져서 미군주둔의 경제적 기여도가 꾸준히 감소되고 있다. 1960년대 미군주둔은 오끼나와 경제의 50% 이상을 감당했지만, 1970년대는 15%로 그 기여도가 떨어졌다. 2005년 현재 군사기지의 오끼나와 전체 경제 GDP의 기여도는 5.5%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Kelly Dietz, 2006).

군대 전체에 의해서 그리고 군인들 개개인에 의해서 소비되는 지역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를 전통적인 군대에 의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직접적인 기여도라고 한다. 군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대부분을 오끼나와 밖에서 조달하며 심지어는 일본 밖에서까지 조달한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젊은 병사들이며, 이러한 연령분포가 그들의 매일매일의 소비의 범위와 성격에 영향을 준다.

군대는 숙소와 군대내에서 음식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자유로 제공하거나 염가로 판매한다. 사병들이 병영에서 소비를 할 때 값싼 음식이나 음료수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자위대의 일본 군인이나 오끼나오 미군부대의 미군 역시 동일하다. 그 결과 값싸고 작은 규모의 바나 편의점이 소비의 주된 장소이며 군인들이 이용한다.

1972년 오끼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이래 군사기지 사용에 따른 간접적인 보상금이 상당한데 한때는 그것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약 6%). 일본 관리들의 표현에 따르면 오모이아리 요산(동정 보상금)의 돈은 미국이 기지를 점령하여 사용하는 대여비와 이러한 일로 인해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예산까지 합쳐진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군대주둔의 상황은 오끼나와 경제의 정체의 요소로 자리 잡고 동시에 관광업 발전의 저해는 물론 다른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만다.

오끼나와인들은 지속적인 미군주둔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군사기지 인근에 살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외에도 공군비행기로 인한 소음과 심리적 좌절감, 기본적인 안정에 대한 불안감, 미군인근처에 범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발생에 대한 대비 등 이런

한 것들이 오끼나와인들이 미군주둔으로 정례화되어 버린 심리적·물리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켜버리는 상황이다.

2차대전 직후 수 많은 오끼나와인들이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었고, 거의 20만명의 시민이 오끼나와 전투에게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오끼나와는 전쟁에 휩싸였고, 여전히 전쟁의 위험을 담보로 한채 전쟁과 군대에 경제를 의지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상당히 큰 것일 수밖에 없다. 95%의 오끼나와인이 미군이 떠난 후 일본군으로 교체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정도로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가득하다 (Kelly Dietz, 2006).

군사훈련지역에서 독성화학물질의 광범위한 방출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오끼나와 자원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폐해는 군사기지화의 또 다른 충격이다. 일본 정부가 군사기지와 군사주둔으로 인한 환경폐해에 대해 다른 공공시설의 건설 등으로 보상을 해주고는 있지만 오끼나와의 환경파괴수준은 복원이 힘들 수밖에 없다.

군사기지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심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이 오끼나와 경제 전체의 23%를 담당하는 데 이를 받쳐주는 환경오염은 관광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서이다. 군사기지와는 거리가 떨어진 호텔에는 오끼나와의 독특성을 강조하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광고들을 볼 수 있다. 오끼나와의 맛을 강조하는 식당, 장수섬으로서의 오끼나와의 건강식품과 요리, 섬유, 공예, 농산물, 그리고 전통문화를 강조하면서 관광객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지만 언제나 군사기지가 걸림돌이다.

오끼나와 주민 85%는 왜 미군철수를 결정했을까?

오끼나와인들은 이제 전환점에 서있다. 1998년 오끼나와 주민투표를 통해 85%의 찬성으로 미군의 철수를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미군기지는 요지부동이다. 다수의 오끼나와인들이 새로운 오끼나와의 역할을 모색한다.

오끼나와가 남동 아시아에 위치해 있어서 이 지역의 평화적이고 생동적인 교류의 역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로 나아가길 바란다. 환경주의자들은 환경치해적이 생태과관이 서로서선 두과근를 찾기 원한다. 호

자는 오끼나와 아열대기후와 온난한 사계절을 이용한 농업과 산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나가길 원한다. 결국 오끼나와의 오끼나와인들을 21세기의 새로운 정체성 정립을 위한 도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실천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Kelly Dietz.2006).

라. 미국령 괌의 군사기지가 관광 및 환경에 미친 부정적 여파

괌 영토의 1/3 이상이 미군사기지이다. 괌은 물론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오끼나와 한국의 평택과는 달리 미군주둔을 하는데 국제적 협상이 필요가 없다. 또한 괌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이며 미국의회에 대표가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대표권은 의회에서의 투표권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괌사람들은 연방선거에서의 투표권은 갖고 있지 않다.

결국 괌의 워싱턴에서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상황은 본토와 괌과의 관계에서 '보지 않으면 멀어진다'는 상식처럼 괌의 이익 반영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군사력이 집중배치되고 있고, 미국의 국가안보에 상당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괌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지역 토착민인 차모르족의 문화나 경제에 발전에 대한 고려는 상당히 불평등하다(Kelly Dietz, 2006).

오늘날 괌의 경제는 주로 관광에 의존한다. 연중 따뜻한 기온과 아름다운 모래사장을 가져 년 100만명 이상이 몰려든다. 또 하나의 경제의 축은 미군의 주둔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군으로부터 투입되는 자본의 유입에 의존한다. 그러나 지금 괌 지역의 지도자들은 괌 사회가 생태적으로 군사화와 관광을 지속적으로 결합시키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섬으로서 괌의 에코시스템은 군사기지화의 과도한 점유로 관광과의 조화를 이룰 수 없을 만큼 훼손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더욱이 지속적인 군사기지의 확대 주둔은 지역정치적 역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Kelly Dietz.2006).

군사기지의 확대로 괌사회의 환경에 두 가지 난제를 남겼는데, 하나는

매일 매일의 작전에 사용하는 신선한 물의 사용은 엄청나서 꾀사회의 물 부족으로 지역 주민에게는 제한급수를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꾀의 관광객들도 신선한 물의 평균 사용량이 지역주민들보다 훨씬 많다. 관광객의 과다한 신선한 물 이나 다른 자원의 사용의 경우 보다 친환경적인 정책 과 규제를 생각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친환경적인 여행의 아이디어를 꾀에서 채용하여 호텔에서의 과다한 물 사용의 자제라든가 환경 친화적인 프로그램에 여행객을 초청한다든가 여행객들도 자원의 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을 통해 꾀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 등이 있다.

문제는 군사기지나 군사작전 등에서의 과다한 자원의 사용될 경우 '국가적 이익' 또는 '작전적 필요성'이라는 논리로 정당화시키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심대한 부정적 영향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군인과 군사기지의 확장은 토지오염, 지하수오염, 이로 인한 해안지역의 하천들의 오염으로 나타난다.

독성화학물질의 사용, 폭발되지 않은 폭발물, 군대의 중장비들은 언제나 환경과 주민건강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군대는 환경적 기록을 모니터하고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군사작전의 비밀주의로 인해 그리고 '국가안보'의 우산에 가려 지역민이 군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 일이다. 군대에서 그리고 군사작전이나 사고로 인해 유출되는 연료와 원유로 인해 군사기지 인근의 어장은 황폐하게 되고 고기잡는 어업은 치명적인 손해를 입어 생업자체가 어려워져 수산업 자체가 위협에 빠진다.

2005년 상반기 꾀환경보호기관은 미국의 해안경비부대 인근의 토양과 해안가에 대한 화학독성물질의 함유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수백군데의 오염된 곳에서 정화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오염된 곳의 절반이 정화작업을 기다리고 있고, 그 정화작업에는 수천만불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가 물론 꾀지역의 군사기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 군사기지 전체에 해당된다. 과다한 물의 사용과 독성 화학물질의 사용

한 오염, 빈번한 사고 등은 모든 군사작전에 공통일 것이다.

제주도도 한국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엄청난 환경적 오염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주지역의 지도자들의 경우 미국의 군사기지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한미 방위협정에 의해 제주도에 해군과 공군기지가 들어서면 미군이 한국의 군사기설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어 당연히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뿐더러 이러한 점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고려해야만 한다(Kelly Dietz, 2006).

미국방부는 신속유지군(global force transformation)의 전략 하에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미국의 해외주둔군은 줄이되 다른 나라의 군대들과 연합 작전을 증가시키고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채택이 한국과 제주도에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우선 제안된 주한미군 기지의 감축이 주한미군 자체의 감축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제주에 해군과 공군기지가 세워지면 한국본토에서의 기지접근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한국의 해군기지는 미군이 사용하는 해군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팜사회의 교훈은 군사기지보다는 관광지향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보다 지속가능하고 자율적인 팜 사회의 길이라는 점을 제주도에 교훈으로 보내는 것이다(Kelly Dietz, 2006).

마. 태평양 군사의 섬 하와이, 오키나와, 괌이 평화의 섬 제주에 보내는 메시지

태평양의 대표적인 세 곳의 군사기지가 지역의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볼 때 하와이나 괌의 경우 관광업 다음으로 영향력을 보이지만 자립적인 경제구조의 건전한 확립과 관광업의 발전방향에는 여전히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오키나와의 경우 군사기지 보상금을 포함한 경제적 효과는 1960년대

작아지면서 지역의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자립경제구조의 확립에 아주 부정적이어서 1998년 주민투표에서 주민의 85%가 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 지역 공히 군사기지가 세워지면 지역의 경제효과가 크다고 말하지만 실체는 그렇게 크지 못하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보상금과 군사기지 운영위주의 의존형 기지경제이어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구조 육성이나 생산적이거나 서비스 중심의 활력있는 경제활동이 아니다.

세 지역 공히 군사기지유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서의 매춘, 저질적인 군사문화, 폭력 등에 시달리며, 특히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의 광범위한 확대와 환경회복의 천문학적 비용에 시달리고 있다.

태평양 세지역 사례의 과제와 문제를 볼 때 제주도의 해군기지의 유치로 인한 7000억의 시설비 건설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 관광정책추진에의 어려움, 사회적 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가중, 환경과 해양오염의 방대한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평화적 이미지의 훼손으로 인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해석이 타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군사기지의 경제는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점만을 부각할 때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전체 제주사회 목표인 세계 평화섬과의 관계, 군사기지에서 생성되는 주변적인 직업과 종속적인 경제구조로의 이행, 범죄와 전쟁 수행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의 과다,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의 과다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이를 경시해서는 안된다.

20세기에도 군사기지가 한번 들어서자 100년이 가듯이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역시 100년은 주둔하게 된다. 따라서 군사기지 경제학의 명암도 10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로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하와이, 괌, 오키나와는 현실로 보여 준다.

군사기지의 경제는 경제만에 국한되지 않음을 오키나와의 군사기지 135년사는 말한다. 오키나와에는 지금 27개의 군사기지가 있는데 1945년

제구역과 20개 항공통제구역이 있다. 일본의 0.6%의 넓이를 가진 섬에 일본주둔 미군 75%가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는 셈이다. 미군 5만명 그들의 부대사업과 식솔들을 합치면 약 15만명 정도여서 전체 인구 130만명 인구의 12%를 차지한다. 경제적으로 미군기지에 의존적이고 나약한 경제구조가 자리 잡는다.

오끼나와인들은 군기지에 일부 직접 고용도 되고 지방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경제의 큰 부분은 일본정부가 군사기지를 사용하는데 따른 동정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국가보조금 (오모이 야리 야산) 의 형태로 공공사업프로젝트나 토지사용 임차금 형태의 지원들이다. 오끼나와의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비약을 꿈꾸어 정책을 오래전부터 추진하였지만 군사기지의 과다로 그 성과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12월 21일 주민투표를 통해 85% 이상이 해노코 공군기지의 건설만이 아니라 미군의 완전철수를 의결했으나 미국과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미국과 직접 담판을 위해 주지사가 미국에 가서 협상을 요구해도 미국이 응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저항과 요구를 거세게 해도 미군기지는 여전히 그대로이다.

오끼나와의 정치 역시 이 문제에 제한을 받는다. 그들은 빈번한 성폭행, 미국이 전쟁이면 오끼나와도 전쟁 중이라는 심리적 불안감,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의 지속 등등의 피해도 크다.

6. 제주도와 도의회의 군사기지에 대한 대응논리와 “세계 평화섬 정책과제”의 단계적 정립과제

가. 세계평화섬 정책 100년 대계를 위한 합리적 논의와 갈등관리의 지혜가 필요하다.

제주도에서 공군과 해군기지 문제가 제주도 도민 간에 찬반논쟁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평화섬의 개념이 제기된 것이 1988년이라면 그 갈등 속에서 세계평화섬 지적과 정책방향을 잡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다.

제주도의 경우 군사기지의 찬반 투쟁의 갈등을 관리하면서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면 군사기지와 세계평화섬 정책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진통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러한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자신의 민주주의의 원리로 키워 나갈 뿐더러 평화문화의 전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제주도는 2005년 가을 이 문제에 대하여 무결정의 결정(Non decision) 으로 군사기지문제 논의를 1년 정도 연기시키는 전략을 선택했다.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선거가 끝나는 기간까지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골치 아픈 난제를 무결정으로 회피하는 현명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논의 중단 시기에 국방부와 해군 공군은 이를 착실히 준비하고 국가예산에 해군기지에 대한 예산안까지 제출하는 시간을 준 반면에 제주도민의 경우 같은 지역에 '세계평화의 섬 환경가든'과 관광미항으로의 개발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이를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국제관광의 가능성을 탐구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대안준비의 기간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나름의 내용을 담은 계획으로 모습은 갖추지 못하여서 주요한 세계평화의 섬을 이끄는 선도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 것 또는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은 세계평화섬 100년을 실현할 '세계평화섬 10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며, 이 계획의 핵심시설 인프라로서 '세계평화섬 환경가든' 또는 '세계평화촌' 건설안을 마련하는 용역에 착수하여 그 안의 내용을 도민 앞에 제시하고 해군기지와 공정한 경쟁을 가질수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100년 미래가 '군사의 섬'이 되듯이 평화섬 정책의 방향을 세워 나간다면 세계평화섬 제주라는 또 다른 미래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세우는 대업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사기지와 세계평화섬 발전정책 간의 선택에 대한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T/F 국선은 바다 줄리적이

인사로 구성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활동시간 역시 최소 1년 이상 연기되어야 한다. 2006년 12월 29일 T/F의 해군기지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발표에서 보고를 책임진 위원회가 T/F의 구성이 찬성하는 인사 위주로 구성되었고 전문가의 부족과 시기간 부족 등의 영향으로 객관적 보고서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일정정도 인정하였다 (제주의 소리 : 2006년 12월 29일자).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도가 소중히 키워나가야 할 원리가 있다면 갈등관리를 민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함으로써 그것이 갈등관리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책과정과 절차가 민주적이라고 함은 언제나 정책적 대안을 구성하는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연구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20년간 세계평화섬 개념이 논의를 거쳐 정부의 정책으로 수용되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는 과정적 시간이 있었듯이 이제부터 세계평화섬 정책의 핵심내용을 구성하는 데는 시간과 예산과 노력이 주어져야 그 정책방향과 내용이 갖추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세계평화의 섬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제주도민 이듯이 군사기지 문제의 결정권도 직접당사자로서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이 우선 존중되고 다음으로 제주도민의 의견을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언제나 이 점을 강조해왔고, 강력한 추진자인 국방부와 해군의 경우에도 해당지역 주민에게도 민주적인 결정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도가 갈등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원칙이어야 한다.

아무리 합리적인 계획이라도 해당지역의 주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고 일차적이다. 국방부의 해군 군사기지의 경우 2005년 제주도의 유보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미리 지역의 일부 찬성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사비 예산을 확보했고 2007년의 예산도 국회에 신청해 있다.

그런데 위미리의 경우 몇 사람에게 의한 찬성을 전체의 찬성으로 위장한

것이 결론이었다. 거기에서 화순의 경우 애초부터 반대였다. 따라서 해군 군사기지의 경우 해당지역의 찬성이나 동의는 받지 못한 것이 되며, 이러한 상황은 지역주민이 반대예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국가예산의 신청이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해당지역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해군의 군사기지 건설안은 해당지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일수록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시 여겨야 한다는 점에서 해군군사기지 문제는 지역당사자의 이해를 다시금 얻어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가 T/F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하여 안덕면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그 구성을 보완하고 활동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연장했다면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갈등관리에서 민주성의 원리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못지 않게 유념해야 할 점은 내용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의 보고서가 해군위주의 해군기지에 대한 보고서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전문가 중심의 세계평화섬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가 있고, 동일한 지역을 “세계평화촌 환경가든”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군사기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시한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잡은 것도 도민들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생적 갈등관리와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본다.

앞에서 제주도가 이의 결정을 위한 세가지 기준으로 세계평화의 정책에의 부합성,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그리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일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세계평화섬 정책의 기준은 제주도가 2006년 1월 27일 이미 제시한 바 있는 세계평화섬 개념의 제주도의 다섯 가지 근원에 입각하여 군가기지만이 평가되어야 한다.

아울러 내용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다수한 군사기지가 한반도 안쪽에

공군기지와 해군기지의 군사기지 건설안과 다른 세계평화섬 환경가든 프로젝트가 제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연구와 양 정책안의 비교를 거쳐 제주도의 미래정책의 내용을 도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가지 안 모두 동일한 지역의 땅 그리고 항구 등을 다른 정책목표와 방향에서 개발하는 것이며, 이 개발의 세계평화의 섬 정책에 부합하면서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그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는 해군기지 논의를 위한 민주적인 과정을 이야기 하였지만 절차적 합리성을 충족시키기에는 그 하자가 너무 커 보인다. 예를 들면 민간 T/F의 구성과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찬성하는 쪽만의 참여와 반대쪽의 참여거부로 제대로 된 역할 수행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던 만큼 향후의 활동을 할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T/F가 그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만큼 보고서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일정정도 상실하였다. 또한 해군기지나 공군기지의 단순한 찬반의 의미만을 상징하여 '세계평화섬 정책안'과 '군사기지건설안'간의 정책적 대결과 논의의 쟁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기에는 아예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따라서 당초 2006년 11월까지 거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고서의 작성하려는 일은 아예 어려운 것이었고 그래서 타당한 문제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하고 불충분한 시간으로 하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군사기지 건설안은 그 자체가 문제를 내포하게 되고 정당성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한 해군이 국회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이 자체가 주민동의를 받지 않아 실질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뿐더러 제주도나 제주도 의회의 이러한 예산집행이나 예산청구의 유보요청 역시 무시되는 상황이라면 해군의 군사기지 건설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여론이다. 따라서 해군이 이러한 일방적인 절차와

경우 군사기지 계획자체의 집행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나. 세계평화섬 정책 주도할 세계평화섬발전 10개년 계획수립이 시급하다.

항공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세계가 하나 되는 곳'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따스함을 알린다. 이러한 홍보 말 때문만은 아니지만, 외국인 학자들로부터 " 미국 정부마저도 하와이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발표하지 못 했는데 한국정부는 어떻게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고(2005.1.27), 거기에서 왜 제주도를 특별한 한반도의 자치도로 발전시켜 나아가 보겠다는 결정(2006.7.1.)까지 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다"라는 지적을 들을 때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섬 정책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묻게 된다

최근 한국정부는 대양해군의 해군항을 건설하고 공군은 나뭇의 전투비행대를 창설하여 한반도 안보의 요충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을 구체화시켜 시행하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나뭇의 논리를 마련하고 정부예산까지 확보하여 독단적인 집행을 해나가고자 함으로써, 코리아타임스의 지적처럼 제주도가 "딜레마에 빠져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섬정책을 구해 나갈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가"하고 걱정들을 한다.

그러나 당사자인 제주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경우 국방부와 해군의 해군항 건설계획은 주민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 강행이라 지적하면서, 군사기지 태스크포스 팀의 운영도 군사기지건설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중의 하나라는 인식하에 참여를 거부하고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모슬포의 주민들은 일차적으로 모슬포의 전적지 등을 문화관광지로 발전시키는 한편 모슬포, 환산, 고산지역을 미국의 노쓰다코타주와 캐나다의 마니토바 주에 걸쳐 조성된 국제평화가든(Int'l Peace Garden)의 비전과 비견할만한 세계평화섬 가든 (World Island Peace Garden)으로 조성하여 동북아시아 평화문화의 메카로 발전시켜나가는 평화섬 발전안을 제기하면서 군사기지를 받아들이기 안을 내세웠다.

이러한 국방부 중심의 군사기지 강행추진과 해당주민 중심의 반대투쟁 사이에서 국제평화기지를 건설하려는 아이디어는 세계평화의 섬 1주년을 기념하는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의 워크숍에서 한 연구원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2006년 7월 제 6차 피스아일랜드 포럼에 참여한 세계 여러나라의 학자들이 제기한 정책청원서에서는 송악산 공군기지의 '평화공원화'와 화순항을 관광미항으로 묶어 '세계평화섬 기든'을 조성하는 제주형 특화사업으로서 "평화성 발전 프로젝트(Peace Island Development Project)을 시행함으로써 이 일대가 세계평화섬 제주의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명소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염원이 지역민이 소망일 뿐더러 제주도의 발전 방향으로서 '세계평화섬의 평화정책'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일이므로 이를 연구하여 구체적인 안으로 만들어지고 제시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의회가 민간기관에 이의 연구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잡고 용역을 주어 연구하게 하여 그 안의 기본 골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제주도가 기존에 내세운 세가지 기준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즉 (1) 세계평화의 섬 정책 내용의 제시와 이와는 부합성 여부 (2) 평화산업과 군사기지의 경제적인 성장효과에의 기여도 여부 (3) 세계평화섬 발전안과 군사기지 건설안 중 안이 세계평화의 섬 정책에 더 기여하는가를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한 후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계평화섬 발전안·용역안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 내용이 제시되는 시점까지는 T/F의 활동을 중단하는 율통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2006년 7월 6-7일 서귀포의 칼호텔에서 열린 제6차 피스아일랜드 포럼에서는 2007년 안이 만들어지고 2008년의 공론화를 거쳐 2009년 결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제주도나 제주도 의회 스스로가 제주사회 스스로가 현실성 있는 지역사회의 대안이 연구되고 논의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두가지 국가정책간의 첨예한 대립이므로 2007년 대선기간 동안 이

고 본다.

왜냐하면 군사기지화의 문제는 1988년부터 무려 20년간이나 연구되고 계획되고 제시된 반면, 세계평화정정책은 2년 정도의 걸음마 단계에 있어 지금 현재 평화섬의 다섯 가지 근원적 연구를 파악한 수준에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핵심정책 내용과 방향의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할 뿐더러 그 속에서 '세계평화섬 발전안'도 만들어지고 제시되어야 한 지역의 발전 방향을 둘러싼 두 가지 정책에 대한 공평한 연구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2005년 9월 지방선거이후까지 해군기지 논의 중단을 결정했고, 2006년 6월 문제해결의 3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T/F의 구성을 하였지만 해군기지 반대측은 T/F가 이 문제에 공평한 역할보다는 해군기지 건설을 합리화한다고 의심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만약 제주도가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면 앞의 세가지 기준에 의한 선택을 위해 세 가지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

우선 대안선택의 공평성의 확보이다. 국방부는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건설을 염두에 두고 오랫동안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안보적 차원의 과제라 하고 지역민들의 단순한 몇 가지 우호적인 발언이나 조사 등을 찬성으로 간주하거나 확대해석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동의로까지 조작하여 철차적 정당성에 하자를 스스로 만들어 버린 우를 범하고 있다. 제주도민이 스스로의 대안으로 '세계평화섬 정책 발전안'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잡고 있는 만큼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 안을 해군기지와 공군기지의 군사기지건설안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야 내용적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세계평화섬 환경기둥이라는 정책대안의 중심 내용을 제시하여 제주도민들이 만들어 낼 세계평화섬 정책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도가 제시한 세 가지 판단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교항목의 근거나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평화섬 정책과의 부합성 정도는 제주도가 스스로 정립한 다섯 가지 평화섬 개념의 구현의 내용과 동

가지 정책안의 부합성 여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평가기준으로서 타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해군기지의 지역경제의 효과에서도 중요하고도 적절한 국내사례와 외국사례(하와이, 오키나와, 그리고 괌)에 대한 비교를 통해 그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기서는 미국의 하와이와 괌, 일본의 오키나와 사례를 제시하고 그 비교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이 문제에 대한 민주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꼭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7. 세계평화섬 정책 정립을 위한 다섯 개의 실천논리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1월 27일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제주도가 세계의 평화섬으로 역할을 하려면 100년의 평화추구의 전통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평화섬의 완성 100년을 위한 세계평화섬발전계획 10개년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틀이 마련되면 세계평화섬 발전안과 군사기지건설안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군사기지에 대한 논쟁 속에서 평화의 섬의 실천논리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다섯가지의 실천논리로 정리해 보겠다.

실천논리 1(세계평화섬 발전계획 자력 수립의 원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세계평화섬의 완성 100년을 위한 세계평화섬 발전계획 10개년 계획안을 마련한 후에야 동일한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세계평화촌 환경가든이 세계 평화의 섬 정책에 합당한지 따질수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세계평화섬 발전계획은 해군기지에 대한 기초조사와 동일한 기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한 후에야 두가지 안의 찬반을 도민에게 물을 수가 있다. 제주도가 이러한 평화섬 정책연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면 해군군사기지 기초조사 지원 역시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여 해군기지에 대한 제주도민 동의조건을 부과하였다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세계평화섬 정책연구와 조사에 대한 균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섬 발전 기본계획안”의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도의회의 해외 군사기지 사찰이나 연구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 지금 현재의 T/F 활동은 중단하고, 정책안이 만들어지고 제시되면 새로이 T/F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제6차 피스아일랜드 포럼의 학자들의 논의에서 제기되고 청원문 형태로 정책권고안이 제기되었는데 민주적인 토론과 절차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1) 두 가지 정책대안인 평화섬 발전계획안 (the Peace Island Development Plan(국제관광미항과 국제평화섬가든)과 군사기지건설안 (the Military Bases Construction Plan)을 균등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2) 두 가지 정책대안이 적어도 2007년과 2008년 2년간 제주도민들의 참여 하에 연구되고 비교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들이 평화섬정책과 군사기지건설 정책을 해당지역의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 및 도민 여론자 수렴 등의 공정한 수단에 의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4) 이러한 주민투표 방식은 2009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6차 피스아일랜드 포럼의 정책청원서 : 2006년 7월 7일).

군사기지 건설의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국가안보의 문제라면 세계평화섬 정책 역시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국가정책이다. 세계평화섬 정책의 경우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대규모의 현대적인 해군이나 공군기지가 없이 국제 협약에 의해 세계평화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면 그 자체가 ‘안보’ 정책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1월까지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논란의

결론은 대한민국 국회가 12월 27일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동의없이 예산안 편성은 근본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예산의 본질적인 요구액은 삭감하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국회는 27일 새벽 4시 15분경 본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예산 139억4800만원 중 실제 사업비 119억4800만원을 삭감하고 연구용역비 20억원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우여곡절 끝에 의결했다. 또 20억원도 도시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해군의 일방통행을 견제했다(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의 소리의 2006년 12월 27일자).

사실 당사자의 동의없는 예산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일방적인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제출 자체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순리에 충실한 것이다. 또한 내년 예산에서 반영된 것은 기초조사비 17억5837만원, 시설부대비 4350만원, 감정단 운영 2억원 등 20억원도 그 사용의 부대조건으로 제주도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도록 한대로 되어 있어 제주도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게 한 것 역시 순리에 충실하려는 결정이라 보여 진다.

여기서 제주도가 구성해야 할 부대조건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우선 해군기지에 대한 기초조사비는 정부예산으로 편성되고 제주도민들이 지지를 받는 동일한 지역의 세계평화촌 환경가든과 화순항의 국제미항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기초조사비가 책정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민이 선택할 정책대안의 연구와 용역에서부터 기회의 불공평성이 발생하게 되어 제주도민이 정책대안과 연구에 대한 접근권과 향유권에 불평등이 초래 한다. 따라서 제주도가 20억의 예산 중 50%를 세계평화섬 발전 정책안 연구에 투입하여 연구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거나 위의 용역에 준하는 비용을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확보하여 동일한 연구기간 중에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대조건이라야 형평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강구없이 T/F를 구성했기 때문에 해군기지 반대 집단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T/F의 보고서 내용도 해군기지의 찬반의 입장을 소개하고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 내용적 정당성 확보에의 불충분성을 스스로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만큼 그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는 위와같은 불충분한 연구를 근거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대토론회 개최와 여론 조사에 대한 도민의견을 묻는 절차를 2007년 1월 중에 실시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러한 도민토론회가 반대자들의 참여없는 토론회가 될 수가 있다. 제주도가 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면 그 내용은 오히려 내용적 정당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군기지 찬반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세계평화촌 환경가든”에 대한 도민의견 조사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군사기지 문제에 대한 국제적 사례조사를 단순히 해군기지 등에 대한 의례적 시찰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군사기지의 설치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세계평화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시찰을 계획하는 것은 역시 오히려 격려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군사기지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려는 대규모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종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도의회의 충분한 조사와 활동이 이루어질 때 까지 당연히 제주도의 도민 대토론회와 의견조사 역시 연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에 대한 두 가지 국가의 정책결정, 특히 안보정책으로서의 ‘군사기지’와 ‘평화섬 지정’ 선택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동의와 지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러한 정책 결정요인을 우리는 정책형성에서의 당사자 이해 존중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화순항이나 위미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고 절대적이듯이 세계평화섬 정책 결정에서도 지역민의 지지 역시 절대적이다.

따라서 군사기지가거 퍼해서 정책이거 이러한 지역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다면 그러한 정책의 추진은 지역적 정당성도 시대적 타당성도 갖지 못하므로 주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기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

실천논리 2 : UN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 국제기구 유치설립논리

“한국정부는 우선적으로 “세계평화의 섬”을 중립 비무장 평화지대로 선언하고 UN을 통해 이를 승인 받아 나가야 하고 국제기구의 유치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가 군사기지 없는 세계평화섬 실현을 UN을 통한 보장과 UN기구의 제주유치이거나 제주의 국제기구 설립이 UN의 승인을 받을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UN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국제기구의 유치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국정부와 하고 이를 UN에 건의하여 성사시키는 일을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수행하여야 한다(고 창 훈, 2006c).”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UN의 협력을 받아 국제기구 유치나 국제기구의 설립을 통한 국제적 인정 등 UN차원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청원서를 제주도가 나서서 받고 이를 2008년초 UN에 제출하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국제기구 유치는 유엔평화활동지원센터나 세계섬과 도시 연합체 등 국제기구 유치 같은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일을 통해 제주도가 평화추구의 인프라를 확대하려면 군사기지의 유치는 유보하여야 하며, 향후 제주도가 한반도의 중립화는 물론 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작을 UN을 통해 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세계평화섬에 맞는 평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의 세계평화의 섬 정책이 군사기지가 없는 실질적인 평화의 섬으로 갈 수 있으나 여부는 제주도민의 결정과 비전창출의 정신에 달려있다.

실천논리 3 : 세계평화촌 환경가든을 위한 외국자본 참여투자논리

세계평화섬의 환경가든이나 세계평화촌 조성을 통해 국내외의 자본의 참여와 지역의 이익을 결합시키는 평화공유의 관용정신을 키워야 한다. 고산, 송악산의 모슬포 화순 등의 일대를 세계평화의 메카인 세계평화촌 환경가든, 국제적인 박물관, 국제미항,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해 나가려면 외국과 국내자본이 이 계획을 공유하고 같이 개발해 나가야 한다.

군사기지의 갈등을 넘으며 제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섬의 평화를 대양을 넘어 반도와 대륙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면 송악산 일대에 세계평화섬의 환경가든(World Peace Island Environmental Garden)이나 세계 평화촌(World Peace Village) 또는 이를 혼합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좋다고 본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국제평화가든(International Peace Garden)에 세워 두 나라간의 국경이 분쟁이 아니라 나무와 환경을 아끼는 이웃들의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면 모슬포에 세계평화촌 환경가든이나 평화촌은 제주지역을 여러나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조성하여 아시아의 평화상징으로서 평화적 이미지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래서 송악산 일대나 고산처럼 역사속의 국제교류지로서의 의미를 갖는 곳을 주목하고 있다.

송악산 일대에 기존의 전쟁문화유물을 문화재로 보전하여 국제관광광지로 성숙시키면서, 유엔평화활동센터, 섬 유엔기구 등의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들어서게 하고 아시아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아시아 평화가든 섬지역이 참여하는 섬평화가든 그리고 음악공연장등을 개설한다면 제주평화정신이 평화가든으로 조성되면서 섬으로 세계로 평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가든이나 세계평화촌은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내외의 자본이 전체 또는 개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과 결합은 제주민의 평화정신과 이를 이해하는 국내외 자본의 결합을 가능하도록 프로젝트 내용이 연구되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참 후(2006a)

실천논리 4 : 평화자연문화와 인권이 어우러지는 외교도시로서의 정책 추구의 원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세계평화섬 개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평화정책과 대안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평화자연, 평화문화, 평화의 섬 정책, 43의 인권평화사상, 외교도시로서의 아시아평화への 기여 등 각각의 영역에서의 개념을 각 분야의 정책과 대안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평화섬 개념의 근원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평화문화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을 때 평화증진의 정책이 형성된다. 돌 문화공원, 돌하르방 공원, 해녀박물관 등등 제주의 평화문화를 승화시키는 공원 조성도 평화섬 개념의 구체화에 도움을 준다.

제주자연의 아름다움을 특화시키고 환경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으로서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의 등재나 한라산과 성산일출 등의 UNESCO에 자연유산으로의 등재하려는 일, 제주해녀와 그 민속문화를 UNESCO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국제적으로 환경적·인문적 가치를 공유하게 하며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이나 세계해녀공원 건설 등도 이러한 사례다.

사회적 영역에서 사회를 주도하는 2차 집단인 대학, 언론 그리고 종교 집단이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이 없다면 제주도의 목표는 상당히 어렵거나 지체되리라 본다.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한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방안이 나와야 이에 상응하게 시민단체들 역시 사회적으로 대안창출의 세력으로 기능화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으로는 농협이나 신협 등의 조합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사회단체 역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야만 자유와 평등과 평화로 일컬어지는 三麗思想의 사회적 구현을 제주지역의 원리로 성숙시켜 나갈 수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재정자립도를 강화하는 자립경제의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상생적 외자유치 전략으로 평화촌 건설, 국제 병원 대학 및 차이나타운 건설 등 실

현 가능한 외자유치안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제주도가 첨단산업이나 실버산업 지식산업 등 적합한 산업을 유치하여 제주도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균형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블록 형성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평화산업, 생명공학 및 영상산업 등 제주도의 자립경제 구조를 위한 투자와 준비가 있어야 함은 물론 제2국제공항 건설준비 및 직항로 25개 이상 개설 그리고 1차 산업과 축산수산업의 특성화와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적 영역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역문화의 정체성 강화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과 세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화문화축제를 육성하면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어의 공용화와 한글(제주말) 등의 강화프로그램을 동시에 병행시키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 문화의 시대인 만큼 문화영역에의 지원확대를 통해 예술과 문화의 선진화와 특성화에 대한 정책적 안목이 절실하다. 또한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를 포용하여 제주문화, 한국의 문화 그리고 외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교육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이룸으로써 4.3의 역사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의 교재를 스스로 펴내는 등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교육의 세계화에 필요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마련과 병행 시행이 요구된다(고창훈, 2006a).

실천논리 5: 4.3 인권예술과 제주평화문화의 결합논리

세계평화섬 정책결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주의적 평화추구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4.3인권예술제가 4.3의 아픔을 쌓어내고 그 자리에서 섬의 관용성을 키우듯이 평화문화축제의 육성은 제주지역의 평화문화를 국제적으로 공유해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지역의 시대 그리고 문화의 시대라고 할 때, 제주가 세계평화섬으로 정착하는 것은 제주 지역주민의 관용과 평화의 정진의 산물이다.

제가 문화적 브랜드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한 나라의 국방과 안보는 중앙정부가 총괄적인 권한을 갖기는 하지만 그 정책 집행은 지역의 동의와 지지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제주4·3의 대학살이 지역민의 동의와 의견 수렴없이 이루어진 최대의 비극이었다는 사실을 제주도민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나 도민들은 국방부가 제주도에 공군기지와 해군항이 필요하다는 안보중심의 중앙정부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고, 이러한 평화섬 정책은 제주도에 새롭게 적용시키려는 국제적 동의를 안보개념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4.3때의 일이다. 1948년 4.3 이후 1954년 9월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제주시(성내)에는 아예 거지가 없었다. 그러한 격량과 혼란의 세월을 맞이하면서 제주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보살피는 나눔과 배움의 관용정신을 실천한 일은 놀라운 일이었다. 정하은 교수는 이러한 제주인의 자랑스러움을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三麗思想의 발로'라고 자랑스러워 했다. 이러한 평화쌍기 전통은 1988년 송악산 공군기지 반대 운동 속에서 제주도를 '군사지대'가 아닌 남북한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번영을 연결시키는 평화지대로(Peace Zone)서의 완충적 역할이라는 정책 지향점을 찾아낸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평화쌍기의 전통을 평화의 섬으로 이어 나가려는 평화추구의 전통은 적어도 20년의 성년에 이르렀다.

제주지역의 사람들이 쌓아온 지역주의적 평화쌍기의 전통이 지역주의적 평화주의 정신과 정책으로 자라고 있다는 확인을 2006년의 '평화나 군사기지나'의 논란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라는 지역에서 자라는 '세계평화섬의 나무'라는 정책이 자라 '지역주의적 평화정신의 숲'을 이루고 그 숲이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의 기여와 공헌을 이루는 평화섬 정책의 흐름을 그 누구도 거역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래야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자리를 찾아 나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지역에서 평화문화축제의 가능성을 찾거나 평화캠프나 평화학교 부임은 위한 선진 미수 등 제주평화의 영역을 넓히고 세계인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시행된다면 이를 격려해야 할 것이다(고창훈, 2006b).

8. 세계평화의 섬 정책이 UN을 통해 국제기구의 창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주도는 그간 외국정상들의 정상회담 장소로서의 외교도시의 가능성과 4.3특별법에 의해 4.3을 정당하게 해결하여 소수자들의 인권정신으로 재탄생시키는 노력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아서 세계평화의 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와 한국정부가 6자회담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UN에 의하여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중립적이고 평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UN국제기구의 창립이나 유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리라 본다. 제주가 동북아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논의를 하는 국제기구나 세계 섬지역의 평화와 인권을 향상시키는 “세계섬의 유엔기구” 같은 조직을 창립하여 국제적 인정을 받아 나간다면 제주도는 제네바와 뉴욕의 평화추구의 전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꿈꾸어 볼 수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가 이러한 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도민과 국민의 서명을 받아 2008년 상반기 유엔사무총장에게 건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네바처럼 준외교적 기능을 가져서 146개국의 외교대표부를 두고 있는 것처럼 국제기구들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위를 한국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세계평화의 정책 10개년 계획안에 대한 용역안이 해군군사기지에 대한 용역연구만큼 중요하므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 의회의 특위가 군사기지 문제를 검토하는 군사특위로 역할을 제한하지 말고 세계평화섬 정책 전반을 다루는 “세계평화섬 특위”로 개편할 것과 특별자치도 제 1기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2010년 6월까지 연장하여 세계평화섬 정책 전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고창훈, 2006c).

참고문헌

- 고창훈(2006a), "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전략세미나"(2006년 11월 17일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협의회 주최 세미나 발제논문).
- Chang Hoon Ko(2006b), " Jeju Island Anti-military Movements and Peace Zone Policy in the Context of Demilitarized Korea"(Presentation paper in the 6th Peace Island Forum, July 6-7, 2006. Jeju Island, Korea).
- 고 창 훈(2006c), " 대한민국 통일연합국 (북한, 남한, 제주도 공화국 연합) 시대를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준비하자", 씨알의 소리 (2006년 11월/12월 합본호), 29-41쪽.
- Charles Thomsen, "The Border Vision : The International Peace Garden," March 22, 1996.
- Gi Moon Ban(2006), "For Permanent Peace Beyond the Nuclear Challenge and the Cold War," Harvard Int'l Review (Summer/2006).
- Glenn Paige(2006), " Is a Nonkilling Island Society Possible?"(Keynote speech in the 6th Peace Island Forum, July 6-7, 2006. Jeju Island, Korea.
- Marie Jacobsson(2006), " Demilitarization of Island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examples of Aalands, the Spitzbergen aechipelago and the continent of Antarctica," (Presentation paper in the 6th Peace Island Forum, July 6-7, 2006. Jeju Island, Korea.
- Kyle Kajihiro, " An Overview of the U.S. Military in Hawai'i", (March 9, 2006).
- Grant McCall(2006), "Rapanui & French Militarization of French Polynesia"(Presentation paper in the 6th Peace Island Forum

July 6-7, 2006. Jeju Island, Korea.

Richard Herr(2006), " The Changing Geopolitics of the Pacific Islands: Regionalism from Strategic Denial to the Pacific Plan,"(Presentation paper in the 6th Peace Island Forum, July 6-7, 2006. Jeju Island, Korea.

Dai-Yeun Jeong, " Island Environment Heritage and Security", (Presentation paper in the 6th Peace Island Forum, July 6-7, 2006. Jeju Island, Korea.

David Kim, " A Path toward a Transnational Justice : Jeju 4.3 in Global Trend," (Presentation paper in the 6th Peace Island Forum, July 6-7, 2006. Jeju Island, Korea.

Sung Soo Kim, " Jeju Stands Up as a Symbol of Human Rights and a Peaceful World," (Presentation paper in the 6th Peace Island Forum, July 6-7, 2006. Jeju Island, Korea.

Kelly Dietz, " Erasing Colony : Foreign Military Presenc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tate," (Presentation paper in the 6th Peace Island Forum, July 6-7, 2006. Jeju Island, Korea.

Willam Cannon Hunter(2005). "Standing Stones of Jeju: The DolHareuBang," Peace Island (2005, Vol 1).pp. 28-33).

The 6th Peace Island Forum Petition (July 7, 2006).

Korea Times, "Peace Island in a Dilemma over Naval Base" (July 17, 2006)

제민일보 (2006년 12월 27일자)

한라일보 (2006년 12월 27일자)

제주의 소리 (2006년 12월 27일자)

제주일보(2006년 11월 3일자)

<Abstract>

A Study on Ideas and Strategies for World Peace Island

Chang-Hoon Ko

As Jeju island not only was designated "Worldpeaceisland" by Korean government on January 27,2005 but also became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n July 1, 2007. It laid the groundwork for the island to become an international hub for peace business and tourism. But Cheju authorities now face their first daunting task of resolving a controversial issue around the possible establishment of a military base on The island, which could become a potential "detonator" for social discord. the Navy announced it would resume a naval base development project in Jeju Island. The project, initiated in 2002, has been suspended since then because of opposition from locals, l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pporters of the plan have insisted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port will bring economic benefits to local people by inducing a great amount of direct investment into the region regarding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or soldiers. Opponents have argued that the construction cannot suggest clear evidence of future economic growth, citing the case of Japan's Okinawa where American troops are being stationed and local economy is stagnant. Some civic activists also raised suspicions of the project being related to the country's joining in the U.S.-led missile defense (MD) system, making Jeju vulnerable to international terrorism and becoming a potential military target from anti-U.S. militants. The Navy admits that U.S. aircraft carriers can visit the port, but makes it clear that it has no plan to join the MD and make the port

a permanent station for U.S. forces. The strategic importance of Jeju is shown by the fact that Japan's troops used Jeju as its main forward-deploying base during its colonial rule of the peninsula (1910-45). The U.S. military also used bases in the island between 1945 and 1948. According to government statistics, there are about 137 military base sites in Jeju, including 73 cave camps in the southern area, used by Japanese troops. The Air Force has also sought to have a strategic air base here since 1988 but Jeju residents have opposed it. Under the "Defense Reform 2020," a 15-year military reform plan announced in 2005, the military is seeking to transform its manpower-based armed forces structure into a slimmer but much stronger and agiler force employing cutting-edge weapons systems. The plan also focuses on improving the naval and air forces. The opponents of the project are concerned that the naval base construction would lead to the eventual militarization of the island, which was designated as "the Island of World Peace" on Jan. 27, 2005, and would impede the island's tourism industry. They are also worried about many possible problems from the military presence here, such as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sewage from ships and the introduction of what some refer to as "low-quality" military culture onto the island.

In a word, I suggested developing the island into a "Peace Buffer Zone," along with the Demilitarized Zone (DMZ) near the inter-Korean border, to play a peaceful role for reunifying the two Koreas instead of invitation of military bases into Jeju island. If we have two peace buffer zones in Jeju Island and the DMZ, this means Korea could take one more step toward a relatively neutral Korea through internal means, rather than by international efforts. I also proposed a plan to develop Hwasun port into an international tourism port and construct an "international peace garden" on the old site of Japanese air base in Mt. Songak, modeling after the International Peace Garden in Manitoba, Canada, and North Dakota in the

United States. To make Jeju a genuine peace buffer zone, it is essential to obtain international status as a Peace Island, citing the examples of Costa Rica, Aaland islands of Sweden, and Spitzbergen of Norway. it could play a peaceful role with neighboring countries. It's time for Korean people to make a big decision regarding the making of a peaceful and neutralized Korea.

Key word: World Peace Island, peace island petition, peace garden, peace industry, peace culture,